

# 내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 전북자치도, 김 지사 주재 보고회 열고 신규사업 발굴상황 점검·예산 확보 방안 논의 현재까지 신규사업 총 499건 총사업비 34조4000억원 규모... 도민경제 부흥 등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25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3년 연속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25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에

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경제 트네상스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사업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개선 및 편의증진 사업,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전략 사업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연계가능한 사업 등을 2025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

정하고, 1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5~2026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은 총 499건 총사업비 34조4,000억원 규모로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다양

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전북 도민경제 부흥과 관련,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구축, △미래 방사선 감점기술 고도화 사업,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농생명 산업수도와 관련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스마트축산 ICT 클러스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관련 △국립모두예술품플렉스 건립,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과 관련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사업(남북3축), 도민행복·희망교육과 관련 △국립 지역권 산지약용식품 특화단지 조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섬진강범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 등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제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스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 “정책경쟁 통해 아름다운 경선문화 확립을”

### 민주당 소속 자치도의원들, 전주병·정읍고창 등 일부 지역구 고소·고발전 남용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들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정훈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자치도의회 의원들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유행하고 있어 정치권을 향한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30일 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악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일부 지역의 선거과정에서 만연된 고소·고발 행위는 국민과 지역민의 요구에 어긋난 배신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고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재훈 기자

## “시민의 광장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

###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전주병 예비후보들에 공개 제안 상대후보 대상 비난·비방 표판 얻으려는 쉬운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가 총선 출마 지역구 예비후보들에게 정책공약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최근 전주병으로 출마한 김성주·정동영 두 후보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황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자고 나선 것. 황 예비후보는 제안문에서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표판 얻으려는 쉬운 선거,



위기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공약도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크고 작은 지역문제들이 방치된 채 전북정

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황 후보는 “선거가 이런 양상으로 계속 될 경우 이번에도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은 알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한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반사이익만을 노려 당선되는 쉬운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어떤 형식과 제안의 토론회도 수용가능하다고 밝히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오는 4월 총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황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자치도의회 행차위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30일, 제40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장의 자격 검증과 함께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에 있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교육청의 입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주장하며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감사권과 관련된 교육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의원은 “감사업무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직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사직렬 운용 등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고, 전보 기간이 끝나면 전보 또는 육이후지를 신청하는 등 감사관실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중참여로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인력·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추천자인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명정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영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보다 앞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제주, 경남, 대구 등의 경우 기존 독립제 감사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무늬만 바뀐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도지사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새미래 자치도당 “정치적 의견 폼페이 자제하라”

### ‘신당, 민주당 진영의 분열’ 민주당 총선 주자들 비판에 “거대 양당 독점 깨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 목적”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분열’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대한 폼페이·언어폭력을 자제하고 품격 있는 민주 정치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자치도당에 따르면, 전남 신원식 새로운미래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근간으로 정치적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해야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의 독점적 힘으로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는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당 진영의 분열이라는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창당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성명은 민주당 총선 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새로운미래에 따가운 시선을 보낸 데서 비롯됐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독재에 맞서 민주 진영이 단결해야 할 때 전북에 신당을 낸 것은 민주주의와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민주 진영을 분열시킨 명분 없는 창당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결국 도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전주병 지역구 예비후보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하려는 이낙연 신당의 민주당 탈당파의 호남권 상륙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반

## “교원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 김명지 자치도의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당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원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원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 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 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김재훈 기자

## 4-H 활동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 김동구 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농산경위 심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H)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농산경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H활동은 1947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농업발전

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4-H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4-H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4-H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4-H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결산보고에 관련한 조항이 담겨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